

# 민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힘로'

## 당 지도부 강행 속 의총서 찬반양론 팽팽 위헌성 시비도 잇따라...당론채택 난항 예상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협상산증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천권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당내 반발과 함께 위헌론 등이 제기돼 최종 확정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역 토호가 기초의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엄청난 부패를 야기할 수 있다"며 폐지의 부작용을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치개혁 과제로 삼는 것은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의 뜻에 걸린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진성준 의원은 개인성명까지 내고 "정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문제이지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데서 연유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천권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면 원혜영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거스를 정도의 맷집이 없다"면서 정당공천제 폐지 여론이 우세한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 "대선공약이고 당원들 여론조사에서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내에서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와서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는 새누리당이 내심 불만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밀어붙이고 있는 현안을 민주당이 앞서서 반대하는 것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 한 인사는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관을 깨기만 은근히 바라고 있는데 여기서 후퇴하면 자멸한다"

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은 향후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날 수렴된 의견을 모아서 당론으로 정해나가기로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당내 반발을 물리치고 당론으로 폐지를 결정하더라도 '위헌'이라는 더욱 험한 준령을 넘어야 한다는 것.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위헌성 시비가 잇따르자 지난달 24일 관계 기관 및 학회 9곳에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특위에 의견서를 보낸 곳은 3곳으로 이들 중 2곳은 "정당의 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8조 1항과 상충한다",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헌법적 권리로 유독 지방선거에만 차별해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위헌 소지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또 다른 한 곳은 "정당공천제 금지의 입법 재량이지만 정당표시 금지의 위헌"이라는 절충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진보신당도 지난 5일 "민주당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새누리당과 공조하게 된다면 즉시 헌법소원 등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정당공천제 폐지가 시행되기 전에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광옥 위원장에 위촉장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대통합위 첫 회의를 열어 국민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에 대해 보고받았다.

/연합뉴스

## 안철수 "박대통령,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해야"

### 국정원 정치개입 막는 근본적 의지 표명 필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8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관련,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의지 표명과 현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국정원 개혁방안 토론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원론적 입장표명에 그치지 말

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의 "국정원이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발언에 대해 "개혁의 대상이 스스로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안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국정원 개혁의 방향으로 의회 감

시 강화, 국정원 조직 및 기능 분산 등 2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국정원을 정파의 도구로 타락시킨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10년간 국정을 담당한 민주세력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민주세력이) 국정원 전신인 중경과 안기부에 수많은 압박을 받았으면서도 집권 후에는 국정원이 제공하는 잘못된 정보에 넘어간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고 여야 모두를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 '위험수위 장외발언' 자제령

### 당 지도부, 광주 집회 '대선 불복종' 등 경고

국정원사건 국정조사를 앞두고 대역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장외집회에서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돌출발언'이 잇따라 터져 나오자 '자제령'을 내리는 등 내부 단속에 나섰다.

특히 지난 7일 광주 집회에서 나온 대선 불복종으로 비칠 수 있는 임내현 의원의 발언과 박근혜 대통령을 '당신'으로 지칭한 추미애 의원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에

대해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당에 도움이 안 된다", "일부 발언이 수위를 넘고 있다", "부적절했다. 언어를 순화해야 한다"는 등 지적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목표는 국내 정치파트를 해체하는 수준의 국정원 개혁으로, 박 대통령이 사과할 때까지 여론전을 계속하겠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면서도 "우리는 이 싸움에서 대선 결과에 승복할 바 있다"고 선을

그었다.

지도부는 지역별 장외집회를 앞두고 집회를 주관하는 당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 운동본부' 측에도 '정제되지 않은 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당 지도부의 반응은 여론이 우호적인 상황에서 자칫 말실수로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새누리당은 전날 광주 집회 발언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제가 어려워 먹고 살기도 힘든 이 프

거운 여름날에 대선 원천무효투쟁 운운하는 자해공갈단 같은 협박까지 하면서 국민 외면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기호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이라 칭하며 공범이라 한 것은 일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것으로서 야만적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정은 부대변인은 '자해공갈단 협박' 발언과 관련, "새누리당은 오늘날 이처럼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자신들의 국가문란 행위에 대해 가슴에 손을 얹고 먼저 자기 양심고백부터 하기 바란다"며 "국기문란은 누가 해놓고 누구한테 뒤집어씌우려 하는가"라고 반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용섭, 역사교과서 왜곡방지 법안 발의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8일 역사교과서 왜곡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역사교과서 교육과정과 검·인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주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교육과정심의회와 교과용 도서심의회를 법에서 규정하고 ▲교육과정의 제·개정시 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도록 했고 ▲교과용 도서의 검

인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부장관이 교과서 내용 수정시 교과용 도서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역사교과서 내용을 결정짓는 교육과정과 검정심사 업무가 법적 근거도 없이 교육부장관·국가편찬위원장·검정심사위원에게 맡겨져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되고 있다"며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부터 이념이나 정권의 의도에 따라 달라지

지 않도록 법에서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특히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부장관의 교과용 도서의 수정 권한을 제한해 교과용 도서의 내용 수정시 교과용 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교과용 도서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2013년 10월 1일 OPEN

## 3.3m<sup>2</sup> 당 임대료 200만원

###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 187평×200만원 = 임대료 3억7400만원

- 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 2013년 10월 1일 OPEN

## 파격적인 임대료가!

- 지하2층 ~ 지하1층 수영장(사우나, 헬스) 2294평×80만원 = 5억1335만원
- 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평×90만원 = 3억6720만원
- 지상1층 농협지점,하나로마트 845평×500만원 = 42억2500만원
- 지상1층 휴대폰매장 22평×500만원 = 1억1천만원
- 지상1층 미용실 23평×500만원 = 1억1500만원
- 지상1층 약국 69평×1000만원 = 6억9천만원
- 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평×500만원 = 2억2천만원
- 지상1층 롯데리아,엔젤리너스 540평×300만원 = 16억2천만원
- 지상2층 PC방 203평×200만원 = 4억600만원
- 지상2층 레스토랑 166평×200만원 3억3200만원
- 지상2층 볼링장 854평×150만원 12억8100만원
- 지상2층 한정식 387평×200만원 7억7400만원
- 지상2층 ~ 3층 골프장 906평×150만원 13억5900만원
- 지상2층 일식 387평×200만원 7억7400만원
- 지상3층 ~ 4층 영화관 (입점확정)
- 지상4층 패밀리레스토랑 387평×200만원 7억7400만원



상업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